

지역간 연계 · 협력사업을 통한 상생발전



김 선 기
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
1.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

I. 지역간 연계 · 협력의 확대 필요성

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광역화전략 즉, “사업구역의 광역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전략”이며 광역화전략의 성공적 운영기제는 다름 아닌 지역간 연계 · 협력에 있다. 지역개발권, 광역경제권, 기초생활권 등 3차원적 계획권역은 마치 물포수처럼 서로 다투는 지역간 협력의

초광역 개발권, 광역경제권, 기초생활권 등 권역간 연계 · 협력도 포함하는 실용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.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고령화 · 저성장 시대에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중앙-지방간 협력사업, 자치단체간 협력사업, 사업(시설)의 공동 추진을 통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. 인적, 물적 사업

해야 할 뿐 아니라 분산투자 로 인한 거래비용(transaction cost)을 제고해야 하며, 결합생산을 통하여 투입 대비 추가이익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.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공동 생산함으로써 사업규모와 추진역량을 증대시키고 임계수요(criticalthreshold)를 확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(economies of scale)를 실현해야 한다.

편 초광역개발권의 연계협력사업은 동서남해안 인접 시군,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.

구 분	2010년	2011년	2012년	광특계정
(시·도)	(30개)	(40개, 신규 10개)	(40개, 신규 10개)	
초광역	67억원 (5개)	148억원 (6개, 신규 1개)	215억원 (9개, 신규 3개)	광역계정
계	607억원 (35개)	1,231억원 (62개)	1,488억원 (67+α)	

주민들의 생활패턴은